



## 유럽의 항만서비스 자유화법안 의회에서 부결 EU지역 항만하역 경쟁원리 도입 지연될 듯

유럽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항만들의 화물처리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던 항만서비스 자유화법안(European Port PackageII)이 1월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부결됐다.

유럽의회는 이날 실시한 표결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입안한 항만서비스 자유화법안을 532대 12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003년에도 유럽의회 표결에 부쳐 졌다가 항만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각국의 국고지원을 받으며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유럽 내 항만운 영을 자유화하려는 이 법안이 이번에 다시 의회에 상정되자 유럽 항만노조는 "경쟁체제 도입은 대규모 실직과 안전기준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유럽 의회는 또 이날 표결에서 지난 연말 EU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합의된 2007-2013년 차기 EU 예산안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날 EU의 예산안이 새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보다는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및 교육투자에 대한 증액 등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조셉 보렐 의장과 순번제 의장인 볼프강 슈셀 오스트리아 총리, 주세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월23일 3자 회담을 갖고 예산안 추가 협상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로테르담, 앤티워프 등 유럽내 주요

항구의 노동자들은 1월 중순에 유럽의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항만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유럽 항만노조가 유럽연합(EU)의 항만개혁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유럽 각국의 항만이 최근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EU 집행위가 최근 마련한 항만운영 자유화법안(항만계획 2)이 발단이 됐다. 이 법안은 현재 대부분의 유럽 항구에서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화물선적과 하역업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 소유의 항만뿐 아니라 민간 항만 역시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복수의 터미널 운영업자를 뒹야 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용 절감과 화물 처리 시간 단축은 물론 항만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의회가 노조의 반발에 밀려 표결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EU 의회는 2003년 11월에도 노조의 반발에 따라 유사한 법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유럽 경영자 단체인 유니스(Unice)는 이와 관련하여 "법안이 부결되면 유럽의 경쟁력도 함께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내 항만노동자 수는 250만명에 달하며 총 400여개 항만을 통해 유럽 교역물량의 70%를 처리하고 있다